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38
----------	------

제출일자: 2020. 4. 9.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20.3.30.~4.6.) 결과 : 별도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별도 의견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검토완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구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4.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김아름(02-450-7052)

〈 관 계 법 령 〉

법규명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규명	고용정책 기본법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규명	직업안정법
<p>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p>	

과장 【일자리정책과】				담당팀장 【일자리정책팀】				담당자			
성명	박성현	연락처	450-7050	성명	이기봉	연락처	450-7051	성명	김아름	연락처	450-7052